

세계 일류 진격, K의 위기

태평로



배성규
논설위원

대한민국 약자인 K는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일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가 붙으면 명품으로 인식된다. 높아진 국격에 대한 자부심도 담겨 있다. 영화·드라마·팝 등 K컬처에 세계가 열광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K문학을 세계적 반열에 올렸다. K뷰티·푸드·패션도 큰 인기다. K방산은 동남아·유럽·호주를 넘어 미국 시장을 넘는다. K원전은 잇단 해외 수주로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조선 등 K테크의 기술력도 세계적이다. K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또한 높았다.

그런 'K의 진격'에 제동이 걸렸다. 수출과 성장을 떠받치던 반도체·배터리·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반도체는 대만 TSMC에 밀리고 배터리·석유화학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도 위협적이다. K화장품도 예전만 못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한두 분야를 빼면 실적이 좋은 계열사가 없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연말 성과급 잔치를 하던 대기업들은 임원 감축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사정은 더 나쁘다. 주가는 추락하고 환율은 계속 오른

다. 비상 국면이다. K산업의 위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주의 정책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표면적 원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K테크가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은 "신기술 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HBM(고대역폭 메모리) 우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롯데 임원은 "중국에서 울린 경고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K 붙으면 명품" 국격 자부심 주력 산업 경쟁력·신인도 흔들 후진 정치, 정책 실패에 발목 정상화 못 하면 'K=삼류' 될 수도

기술 경쟁에서도 뒤쳐져 있다. 방산은 탄핵 여파에 비상이다. 경제계 인사는 "미국은 빅테크 신기술로 치고 나가고 중국은 치열한 혁신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데 우리나라 성공에 안주해 왔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녹색·동반 성장' '경제 민주화와 창조 경제' 같은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불명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몰았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구호조차 없었다. 정책 방향은 모호했고 국가·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부재했다. 경제 부처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며 뒷짐을

졌다. 금리·부동산·기업 정책은 우왕좌왕했다. 세계 관계자는 "과거 경제 대책 회의에선 수출·고용·세제 등 각종 제안과 요청이 많았는데 이 정부는 중국과 트럼프발 대풍이 몰려와도 무능하게 손 놓고 있었다"고 했다. 성장의 토대가 될 연금·노동·교육·의료·규제 개혁도 구호에 그쳤다.

공직 사회의 복지부당은 일찌감치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는데 나서서자 정권 바뀌면 책임만 진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뒤로 야당이 줄 대는 공직자가 적잖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을 찾아가 먼저 보고하는 공직자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래도 일부는 "야당과 먼저 협의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거야(巨野)의 폭주로 국회 시스템은 고장났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발목 잡고 기업 규제 법안은 쏟아냈다. 반도체법·AI 기본법 등 성장 동력 법안은 번번이 뒤로 밀렸다. 예산도 야당 마음대로다.

최근엔 계엄 총격과까지 났었다. 외국과 거래가 끊기고 증시 자금이 빠져나갔다. 한국에 대한 칭찬과 경탄은 우려와 충격으로 바뀌었다. K민주주의는 계엄과 탄핵에 덮였다. 후진 정치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K명품 이미지를 지 훼손했다. 이대로 가면 K는 더 이상 일류가 아닌 삼류로 전락할지 모른다. 국격 추락과 경제 후퇴를 막으려면 고장난 정치·정책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오로지 대선 생각뿐이다. 총체적 K위기다.

社 說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탄핵 정국 속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경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등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표류는 특히 심각하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생산 기지 확충에 무서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22대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뒤쳐졌다. 하지만 올해도 법안 처리가 불확실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이다.

반도체 경쟁은 몇 달만 뒤쳐져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지어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저녁이면 연구소 불이 꺼진다. 법이 통과돼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명확치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0기 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만

큼 생산도 지연된다. 여야 모두 AI 주권 확보에 필요하다고 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AI 기본법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를 심의하면서 다른 정책 법안 심의는 뒤로 밀려버렸다. 여야 합의된 안건을 먼저 통과시킨 후 상설특검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반도체를 시작으로 조선, 항공, 해운물류, 석유화학 등 부문별 산업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반도체 공장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분담, 반도체 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 반도체 지원안만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주를 이룬다.

지금 당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도체 문제가 나라와 민생에 더 큰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거의 1년 이상 법안 처리가 미뤄질 우려도 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문제만큼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성명까지 냈지만 탄핵 정국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반도체법만큼은 통과시키기 바란다.

'尹 오관' 책임 있는 친윤 의원들, 국민 시선 생각하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 친윤계가 원내 다수이니 그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5선인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엔 원내대표를 지냈다. 대표적 친윤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 국가적 혼란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빚어졌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가 됐는데 친 윤 핵심인 권 의원이 원내 사령탑으로 당 권력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친윤계라고 해도 여당은 민심을 잘 살펴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정책과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그 민심이 대통령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여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을 가장 위하는 길이다. 정치의 상식이다. 그런데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

기보다는 추종만 했다. 민심이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몰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지만, 친윤계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해왔다. 이런 친윤계는 점차 민심에서 멀어졌고 이는 총선 참패의 한 원인이 됐다.

이번 사태 때 대통령의 과국경 결정은 막는 데 친윤계는 어떤 역할을 했다. 친윤계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았고 결과적으로 의원 60여 명이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만들었다. 계엄 해제는 여야나 계파를 떠나 급박하고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친윤계는 계엄 해제마저 방해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오명은 두고두고 국민의 힘에 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여곡절이 있겠지만 당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당내 다수인 친윤계는 국민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생각했으면 한다.

김준의 맛과 삶 [219]

울릉도 콩치젓갈

오래전, 강원도 거진항에서 콩치를 쌓아 두고 상자에 담은 어민을 만났다. 그때는 동해안에서 콩치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몇 년 전 포항 죽도시장에서 콩치를 다시 만났다. 몇 마리씩 좌대에 올려두고 팔고 있었다. 이제 흔한 콩치가 아니다.

김장철이면 고성, 강릉, 울릉, 울진 등 강원도 경북 바닷마을 사람들은 콩치젓갈을 챙겼다. 서해에 새우젓이 있고, 남해에 멸치젓이 있다면, 동해는 콩치젓이다. 어느 것이나 오뉴월에 잡은 것이 좋다. 모두 산란철에 균집을 이루어 회유한다. 생물로 소비할 양보다 많이 잡으니, 말리거나 염장을 했다. 그리고 콩치젓갈은 시간이 흘러 새우젓이나 멸치젓처럼 지역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요즘 그 시가나 지역음식의 경계가 희미해지지만, 콩치젓갈의 음식문화를 뜻심으로 지켜오는 곳이 울릉과 울진이다. 울릉도는 북면 코끼리바위 인근에서는 전통배인 강고배를 타고 나가손으로 콩치를 잡았다. 콩치가 모자반 등 해조류에 산란하는 습성을 이용했다. 모자반을 엮어 손에 쥐고 바다에 넣고 있으면 콩치들이 몰려왔다. 덩석덩석 손으로 잡아배안으로 던졌다. 그렇게 하루에 2000마리는 수월하게 잡았다. 일명 손콩치어업이다.

울릉도 식품점에서 콩치젓갈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한 봉지를 들고 오니 주인이 '콩치젓은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에요'라며 묻는다. 실마 훑어만 할까. 속으로 가져와 동행한 서울 사람에게 권하니, 한 번 맛보고 뚜껑을 닫고 고개



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입에서 냄새가 난다며 손사래를 친다. 콩치는 야까지 꽃이 필 때 나왔다가 꽃이 떨어지면 사라졌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일 년을 기다려야 한다. 서울 사람이 고개를 흔들었지만, 울릉도나 울진 사람들에게 콩치젓 한 것같이 없다. 수육도 새우도 대신에 콩치젓을 찍어 먹는다. 시간이 지나면 육질이 삭아 맑은 액지만 남는다. 이를 간수라고 한다. 음식을 만들 때 약간으로 사용했다. 콩치가 모든 음식의 맛을 좌우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해 현재 공백 사태가 생긴 지 두 달 만이다. 공석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어기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공석을 채우는 것을 미뤘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계산도 있었다. 거의 모두 탄핵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어서 헌재가 이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리 등이 중단됐다.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 추천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방풍위를 마비시키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

히 헌재 재판관 추천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위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하고, 6명의 찬성으로 탄핵·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려면 재판관을 빨리 총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헌재와 같은 중대 헌법기관까지 정치적 유불리로 마음대로 마비시키고, 총원시키고 한다. 헌재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은혁 후보자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그는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상식 밖 판결이었다. 결국 2심은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또 이 판결 직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다. 이로 인해 구두 경고를 받았다. 헌법재판관은 건전한 법상식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아무리 정당 몫이라 해도 내부 검증은 거쳐 기준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헌재를 고의로 마비시키거나 재판관 후보자까지 편향적 인사를 추천하고 있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재명당 《무한 반복 탄핵》이 진짜 내란

이게 대체 뭘 일? 한동훈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건가? 그런가?

한동훈의 《정권 장악 선언》 어떻게 보는가?

- ① 이대로 그냥 굳어지는 건가
- ② 그대로 굳어져야 하나
- ③ 굳어지게 됐다

정권이 말 한마디로?

자유대한민국, 사느냐 죽느냐? 한동훈이 한덕수를 데리고 나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포함하는 국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이게 뭘 일인가? 한동훈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것인가? 정권이라는 게 이렇듯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그저 정당 대표인 한동훈이?

12월 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었다. 이랬으면 《윤석열 대통령직(罷職)》의 정당성은, 누가 바라는 바라지 않든, 원상 회복된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국무 위원도, 국회의원으로, 무엇도 아닌 그저 정당 대표인 한동훈이 나와 "이제부터 나와 이 사람이 국정을 맡아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러면, 아무나 한 나라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건가? 박정희·전두환·김영삼·김대중은 이렇게 간단한 정권 탈취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난리들을 피웠을까?

한동훈처럼 어느 날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헌정 대통령은 식물이다. 내가 그 역할을 맡아 하겠다."라고 발표만 하면 될 것을, 그들은 왜 굳이 군대를 동원한다. 국민투표를 한다. 선심 정책을 편다. 부산을 떨었느냐 말이 다.

《서울 최후의 날》은 오는가?

비(非)좌파의 내부 분열이 《사이공 최후의 날》을 불렀다. 《한동훈의 난(亂)》도 《서울 최후의 날》을 부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탄핵안 재상정이 위법이다! 끝없는 탄핵이 《내란》이다!

기회주의 배신자들에게 경멸을! 자유 국민/시민/투사들, 우리 승리하리라!

이 문제에 대해 묻는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시민/국민의힘/자유 우파 투사들/자유 지성계에 묻는다. 한동훈의 《정권 장악》은 ① 이대로 그냥 굳어지는 건가? ② 굳어져야 하나? ③ 굳어지게 됐나?

김민전·김재현·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답하라. 《한동훈 쿠데타》를 받아들일 참가가? 《조희대 사법부》도 말해야 한다. 정당 대표의 《대통령 직》은 합헌(合憲)·합법(合法)인가?

이 기사는 인터넛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2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